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소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Effectiveness in Food Safety Policy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한익현*, 은종환*, 이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광대학교 교양교육대학**

Ik-Hyun Han(gmum81@daum.net)*, Jonghwan Eun(zert94@naver.com)*,
Jae-Wan Lee(noso791@gmail.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감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열로짓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 결과, 정책인지도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정부가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잘 알고 있을수록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신뢰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감성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어 불량식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신뢰 향상, 불량식품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불량식품 근절정책 | 효과성 | 정책인지도 | 신뢰 | 민감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effectiveness in food safety policy,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For this, we apply ordered logit analysis using 「The Survey on the Attitudes towards Food Safety Policy」 data investiga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olicy litera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rus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sensitiv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perceived by consumers. This study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more information about policies and make an effort to gain trust on food safety policy.

■ keyword : | Food Safety Policy | Effectiveness | Policy Literacy | Trust | Sensitivity |

접수일자 : 2015년 09월 25일

수정일자 : 2015년 10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0월 27일

교신저자 : 이재원, e-mail : noso791@gmail.com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감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 조직 구축’, ‘부적합식품 차단·추적관리 강화’, ‘식품안전 분야 소비자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였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3년 5월 8일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 등 8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범정부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와 함께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비자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민안전을 위한 4대악 척결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경우 2013년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총 2,193건을 적발하여 4,388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악의적인 사범 113명을 구속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을 1,627톤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3]. 이를 통해 식품안전체감도가 2012년 66.6%에서 2013년 72.2%로 상승하였다[4].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실질적인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단속과 적발 등 성과 올리기에 치중한 결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비판이 존재한다[5]. 또한 어린이 불량식품 근절정책 역시 전시행정으

로 인해 학교주변 영세업자들의 떡볶이, 어묵 등 즉석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위생에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6]. 이와 같이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해 일반국민이나 소비자들은 객관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 인식에 있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소비자들의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정책인지도, 불량식품 정보원으로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불량식품에 대한 민감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관한 논의

불량식품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불량식품”은 “위해식품”, “부정식품” 등의 용어와 의미상 혼란이 있으며[7],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비위생적인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8]. 식약처(2013)는 불량식품을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면서, 협의로는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 광의로는 “허위·과대광고·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이라고 규정하였다.

식약처(2013)에 따르면 불량식품 근절정책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불량식품 근절”을 국정전략으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한다. 추진전략의 보다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률을 높이고,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여 경제적 이윤동기로 인한 불량식품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한편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식품범죄 사범 처벌강화, 학생안전지역 내 문방구점 등 식품판매행위 금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인터넷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차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9]. 현재 시행 중

인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정책효과성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설

2.1 주관적 정책효과성의 측정과 의의

정부정책의 성과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주관적 방식과 객관적 방식으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방법은 목표달성도, 효율성 또는 정책투입, 산출, 영향의 형평성(equity of policy inputs, outputs, impacts) 등으로 측정하는 반면, 주관적 방법은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한 일반시민의 태도로 측정한다 [10]. 이러한 두 가지 측정방법은 측정의 정확도 내지 측정방식의 우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11], 양자의 관계는 상호독립적인 동시에 상호보완적이다.

최근 정책효과성을 측정함에 있어 일반국민의 인식이 유의미한 준거가 된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일반국민에 의한 평가 또는 시민평가가 강조되는 배경으로 국민주권사상의 강조 또는 수요자 중심 행정 패러다임[12], 민주화와 지방화[13], 소비자중심주의의 영향[14] 등을 각각 제시한다. 정책의 효과성 측정에서 일반시민의 시각을 중시하는 것은 정책 '수용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정책효과에 관한 측정이라는 점

에서 중요하다[15].

본 연구의 불량식품 근절정책은 정책대상인 “불량식품”에 관해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16], 투입 또는 공급 측면에서 정책범위나 내용을 명확하게 한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아울러 불량식품 근절정책은 소비자 요청제(식품위생법 제16조), 위생점검 참여제(식품위생법 제35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객관적 방식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주관적 방식에 의한 측정이 유효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2.2 주관적 정책효과성 영향 요인

Brown과 Coulter(1983)는 주관적 정책효과성인 주민만족도(citizen satisfaction)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그 영향요인을 ①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②정치적 태도, ③ 객관적인 서비스 조건 등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등이며, 정치적 태도는 정부의 질에 대한 평가와 효능감이며, 객관적인 서비스의 조건은 서비스 전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인식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Brown과 Coulter(1983)의 견해에 따라 정치적 태도와 서비스 조건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

표 1. 불량식품 근절정책 개요

구분	주요원인	개선안
▶ 생산·공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변조 등을 통한 시세차익 발생 (위·변조 고가 판매) · 규제완화에 따른 식품영업자의 진입 용이 (영세한 산업구조 형성) · 농·축수산물 생산 원료 안전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HACCP 지원 확대 · 제조품질관리인 지정제 도입 · 오염 환경 생산품 판매 제한 등 추진
▶ 유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 이후 관리체계로 근원적 차단 미흡 (저가·저품질 수입식품 증가) · 다이어트, 정력 관련 부정·불량식품의 해외 인터넷 구매 사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 · 수입자, 품목, 제조사별 차별 관리 · 수입식품특별법 제정 · 증개·구매대행업 신설
▶ 수요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국민 중 43% 이상이 하루 한끼 이상 외식음식점 이용 · 어린이 선호저가·색소과다 첨가제품 개발 · 과대·허위표시 건강기능 식품의 어르신 대상 유인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 학교, 문방구 등 우수판매 지정 확대 · 시니어, 시민감시단 활용 상시감시 · 표시·정보 확대
▶ 제도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에 비해 부당이득이 큰 구조 · 품목·업체 중심의 관리 체계로 반복 위반자 발생 · 각 기관별 수집정보 공유 협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영업자 추적관리 및 이득환수 · 형량하한제 확대 · 범부처 근절대책 마련 및 협력 · 식품안전정보망 통합 구축
▶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식품 폐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예방교육, 초등학교 교과 반영 · 공익 캠페인, 나트륨 저감화 운동 등 실천운동 전개

다. 정치적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정책인지도 및 신뢰를 포함하였고, 객관적 서비스의 조건에는 불량식품의 정의 및 범위와 관련된 민감성을 포함하였다.

2.2.1 정책인지도

정책인지도(policy literacy)는 정책이해도, 정책지식 등의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다. Denver와 Hands(1990)는 ‘정치과정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책인지도로 정의하였다[17]. 한편 최연태·박상인(2011)은 ‘정책과정과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를 정책인지도로 정의하고 있다[18]. 정책인지도가 정책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19], 임도빈 등(2012)은 공공정책에 대한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경우도 그 효과성에 정책인지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영희·이승신(2010)에 따르면 소비자의 식품위험과 안전에 관한 인지도는 식품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20]. 이와 같이 식품안전 분야에서 시행되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있어서도 일반국민이 정책관련 정보를 습득하여 정책인지도가 높아지면 정책효과성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정책인지도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신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정책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정부신뢰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평가적(evaluative)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21], Fitzgerald와 Durant(1980)는 정부가 일반시민들의 요구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 정부성과를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다[22].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경우 식품안전 분야에서 직접 불량식품을 식별하거나 적발하여 시장에서 배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시민들은 정부부처 및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23].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는 곧 정부에서 제공하는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므로, 신뢰는 주관적인 효과성에 불가결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직접적인 정책수요인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24]. 반면,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 식품안전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식품에 대한 불안수준은 이전보다 감소할 것이다[25].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신뢰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민감성

정책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민감성이 있다. 여기서 민감성은 사안의 위험(risk)에 대한 인식주체의 자각 정도를 가리킨다. Sandman(1987)에 따르면 어떤 위험요인에 대해 전문가가 객관적·과학적으로 산정하는 위해(hazard) 정도와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감(outrage) 수준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하며, 어떤 대상이 지닌 위험(risk) 수준을 위해(hazard) 정도와 불안감(outrage) 수준의 합으로 규정하였다[26].

불량식품에 대한 위험(risk) 수준은 불량식품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나 전문가들의 규정과 일반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준(민감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불량식품 근절정책이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수요는 일반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다. 따라서 식품 유형에 대해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위험 수준은 정책효과성과 직결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일반국민이 지각하는 불안감(outrage)과 정부나 전문가가 규정한 위해(hazard)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나 전문가가 규정한 불량식품의 개념은 관련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책목표인 불량식품 근절과 식품안전의 달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은 일반국민이 지각하는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감, 즉 민감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민감성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의 모형과 방법

1. 연구의 분석틀과 방법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종속변수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효과성이며, 독립변수는 불량식품 근절정책 인지도,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불량식품 정보에 대한 신뢰, 불량식품에 대한 민감성이다. 그리고 통제변수는 Brown과 Coulter(1983)가 주장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구원수, 혼인여부, 식비지출액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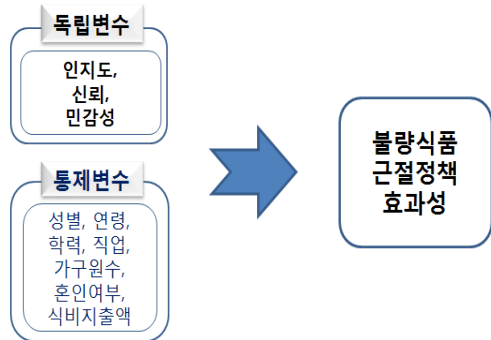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불량식품 근절정책 효과성은 ‘많이 증가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많이 감소할 것이다’는 효과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순서화되어 있으므로 서열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으로 분석을 하였다. 서열형(ordered-type)으로 측정된 불량식품 근절정책 효과성을 통상최소자승법(OLS)으로 분

석할 경우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문제와 함께 오차항의 이분산성 문제도 발생한다. 이산적 응답을 처리하지 못하는 전통적 회귀식의 한계와 서열화된 선택의 분석이 어려운 로짓모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서열로짓모형이다[27].

2. 변수의 측정과 자료수집

2.1 데이터의 출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식약처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감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불량식품 근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28].

본 조사의 표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배분추출을 통해 표집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을 통해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29].

2.2 주요 변수의 측정

2.2.1 종속변수의 측정: 정책효과성

정책효과성(effectiveness)은 정책목표의 달성도라고도 불리며, 정책결정시 설정한 목표가 실제 정책집행으로 기대한 바를 얼마나 달성하느냐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을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목적인 불량식품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의하여,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불량식품이 양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물었다. 그 응답으로 ‘①많이 감소할 것이다, ②약간 감소할 것이다, ③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④약간 증가할 것이다, ⑤많이 증가할 것이다’의 5점 척도로 역코딩(reverse coding)하여 측정하였다.

2.2.2 독립변수의 측정: 인지도, 신뢰, 민감성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정책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귀

함께서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①모른다, ②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모른다, ③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는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 관련 정보에 관한 신뢰를 의미한다. 정부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신뢰는 “귀하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정부부처 혹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불량식품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①매우 신뢰한다, ②어느 정도 신뢰한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민감성은 특정식품의 위험을 어느 정도로 불안하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귀하께서는 다음 식품들이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선택지인 ‘1.식품 관련법을 위반한 식품, 2.원산지 위반 식품, 3.저가, 저품질 식품, 4.학교 앞 과자, 떡볶이 등’에 대해 ‘불량식품이 아니다(=0), 불량식품이다(=1)’라는 응답을 받아 4개 문항 응답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2.2.3 통제변수의 측정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로 남자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고,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학력은 응답자의 교육수준으로 ‘①고등학교 졸업 미만, ②대학교 재학, ③대학교 졸업, ④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직업은 ‘관리전문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전업주부, 무직 및 기타’로 구분하여 관리전문직을 기준(reference)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가구원수는 응답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측정하였고, 혼인여부는 미혼(=기준)과 기혼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식비지출액은 “가족 전체의 한달 식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으로 ‘①20만원 미만, ②20만원~30만원, ③30만원~40만원, ④40만원~50만원, ⑤50만원~60만원, ⑥60만원~70만원, ⑦70만원~80만원, ⑧80만원~90만원, ⑨90만원~100만원, ⑩100만원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IV. 분석의 결과

1. 주요 기초통계

1.1 응답자의 주요 특성

표 2. 응답자의 주요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여 성	522	52.04
	남 성	481	47.96
혼인여부	미 혼	220	21.93
	기 혼	783	78.07
교육수준	고졸 이하	437	43.57
	대 재	70	6.98
	대 졸	422	42.07
직업	대학원재 이상	74	7.38
	관리전문직	108	10.83
	화이트칼라	211	21.16
	블루칼라	53	5.32
	전업주부	269	26.98
식비지출액	무직 및 기타	356	35.71
	20만원 미만	68	8.22
	20만원~30만원	78	9.43
	30만원~40만원	100	12.09
	40만원~50만원	108	13.06
	50만원~60만원	116	14.03
	60만원~70만원	45	5.44
	70만원~80만원	35	4.23
	80만원~90만원	20	2.42
	90만원~100만원	103	12.45
100만원 이상	154	18.62	

주: 직업에 6개 결측치, 식비지출액에 176개 결측치 존재.

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서처럼 성별의 경우 여성이 522명(52.04%)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혼인여부는 기혼이 783명(78.07%), 미혼이 220명(21.93%)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37명(43.57%), 대졸이 422명(42.07%)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직업은 무직 및 기타가 356명(3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가 269명(26.98%)으로 그 뒤를 이었고, 화이트칼라가 211명(21.16%), 관리전문직이 108명(10.83%) 순이었다. 식비지출액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154명(18.62%)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60만원이

116명(14.03%), 40만원~50만원이 108명(13.06%), 90만원~100만원이 103명(12.45%), 30만원~40만원이 100명(12.09%) 순이었다.

1.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55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인지도의 평균은 3점 만점에 1.352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신뢰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14점, 민감성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372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최소값이 19세, 최대값이 87세, 평균은 47.461세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최대 8명이며 평균은 3.338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효과성	978	3.551	1.046	1	5
인지도	1,003	1.352	0.559	1	3
신뢰	995	3.314	0.953	1	5
민감성	1,003	2.372	1.073	0	4
연령	1,003	47.461	16.406	19	87
가구원	1,003	3.338	1.271	1	8

2.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2.1 주요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종속변수인 불량식품 근

표 4. 주요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1.효과성	1.000						
2.정책인지도	0.076**	1.000					
3.신뢰	0.185***	0.071**	1.000				
4.민감성	-0.067**	0.031	0.026	1.000			
5.연령	0.067**	0.149***	0.023	0.158***	1.000		
6.교육	0.005	0.012	0.081**	-0.048	-0.344***	1.000	
7.가구원수	0.012	-0.012	-0.049	-0.133***	-0.294***	0.096***	1.000
8.식비지출액	0.000	0.103***	0.009	0.035	-0.029	0.228***	0.265***

주: * p<0.1, ** p<0.05, *** p<0.01

절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인지도, 신뢰 및 연령은 유의미한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민감성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먼저 정책인지도와 신뢰, 연령, 식비지출액은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 신뢰와 교육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민감성은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 가구원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연령은 교육 및 가구원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교육은 가구원수 및 식비지출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구원수는 식비지출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산하였는데, 평균 VIF가 1.59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었다.

2.2 정책효과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서열로짓분석의 결과를 보면 [표 5]와 같다. 비례오즈모형(proportional-odds model)에 의한 서열로짓분석은 관찰된 범주형 자료에 관찰되지 않은 연속형 잠재변수가 있다고 가정한다. 잠재변수가 일정한 문지방(threshold)을 넘어서면 관찰된 범주형 변수의 값이 바뀐다[30]. 개념적으로 연속형인 정책 효과성이라는 종속변수를 5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절삭점이 [표 5]의 /cut1, /cut2, /cut3, /cut3, /cut4이다.

우선 정책인지도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서 연구가설 1은 채택(fail to reject)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다양한 종류의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그 정책의 편익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일반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낮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31].

다음으로 신뢰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서 연구가설 2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공급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정보비대칭 상황에 처해 있는 일반국민들이 식품 선택의 의사결정을 할 때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신뢰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어 불리한 선택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게 된다. 반면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를 잘 믿지 않는 경우는 더 적은 정보를 가지며 정보탐색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가 동일한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감성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어 연구가설 3도 채택되었다. 불량식품의 정의를 더욱 포괄적으로 하고 그 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하는 민감성이 높을수록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감(outrage)이 크며 정부나 전문가가 특정 식품에 대해 규정한 위해(hazard)와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을 더욱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들 중 성별은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어 여성이 남성보다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연령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쳐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교육수준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정

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책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쉽기 때문에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을 기준으로 할 때, 블루칼라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그 다음이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수입식품보다는 일상적인 식품들에 대한 주요 소비계층은 관리전문직보다는 블루칼라와 전업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들이라는 점에서 블루칼라와 전업주부가 그 정책의 효과성을 체

표 5. 서열로짓분석의 결과

구 분	Coef. (S. E.)	z	Odds Ratio	
정책인지도	0.247** (0.116)	2.12	1.280	
신뢰	0.373** (0.073)	5.11	1.451	
민감성	-0.107* (0.063)	-1.69	0.899	
성별	-0.305* (0.166)	-1.84	0.737	
연령	0.011 (0.006)	1.66	1.011	
교육수준	0.125* (0.070)	1.79	1.133	
직업 (기준= 관리 전문직)	화이트칼라	0.104 (0.239)	0.43	1.109
	블루칼라	0.592* (0.344)	1.72	1.808
	전업주부	0.438* (0.259)	1.69	1.549
	무직 및 기타	0.216 (0.223)	0.92	1.241
가구원 수	0.049 (0.058)	0.85	1.050	
혼인여부	-0.009 (0.234)	-0.04	0.991	
식비지출액	-0.019 (0.023)	-0.84	0.981	
/cut1	-0.774 (0.554)		-0.774	
/cut2	0.316 (0.542)		0.316	
/cut3	1.910*** (0.545)		1.910	
/cut4	3.781*** (0.560)		3.781	
관측치	800			
Log likelihood	-1098.433			
LR χ^2	52.08			
Pseudo R ²	0.023			

주: * p<0.1, ** p<0.05, *** p<0.01

감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외의 통제변수인 가구원 수, 혼인여부, 식비지출액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의 많고 적음이나 혼인여부, 그리고 식비지출액은 별다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이 실제 효과가 발휘될 것인지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서열로짓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 결과, 정책인지도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서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종류의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잘 알고 있을수록 그 정책의 편익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신뢰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서 연구가설 2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비대칭 상황에 처해 있는 일반국민들이 식품 선택의 의사결정을 할 때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불량식품 정보를 더 신뢰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어 불리한 선택을 줄일 수 있어 그 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한다. 그리고 민감성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서 연구가설 3도 채택되었다. 이는 불량식품의 정의를 더 포괄적으로 하고 그 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하는 민감성이 높을수록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그 근절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추정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우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정책인

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은 생산·공급단계, 유통단계, 수요자 측면, 제도 측면, 교육·홍보 등 영역별로 여러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어 복잡다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낮은 평가와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불량식품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보의 질과 함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근절하고자 하는 불량식품의 범위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국민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면 그 근절정책의 효과성 인식에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불량식품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신뢰,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무엇보다 관련 정보의 공개가 중요하다. 정부기관이나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어떤 식품이 위험한지, 그리고 위험의 정도는 얼마인지를 알아야 어떤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볼지를 정하게 되고, 그 불량식품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며,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불량식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누락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이념이나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강도나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단일조작 편향(mono-operation bias)가 존재할 위험이 있다. 정책효과성, 정책인지도 등 주요 개념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 구성개념 타당성이 떨어지는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한 설문 설계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머니투데이, “박근혜 정부 ‘4대약 체결’ 로드맵 나왔다: [새정부 국정과제]인수위 “4대약 체결로 안전한 사회 구현”, 2013.2.21.

[2] 파이낸셜뉴스, “식약처, 10일 불량식품 근절 국민 공감대 형성: ‘소비자포럼’ 개최”, 2014.12.9.

[3] 경찰청, “경찰청 브리핑: 경찰청, 앞으로도 불량식품 계속 근절해 나가기로”, 2014.2.

[4] 아시아경제, “이슈: 박근혜 정부 ‘국민 안전’ 정책 1년, 성과는?”, 2014.2.4.

[5] 한국외식경제신문, “불량식품 근절? 사전 예방 ‘절실’”, 2014.4.25.

[6] 의학신문, “생색내기 행정, 어린이 불량식품근절 ‘뒷걸음’: 김명연 의원, 학교인근 영세업체 개선 뒷전-매점 지원 집중”, 2014.10.7.

[7]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 업무계획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행복”: 주요정책 추진계획, 2013.

[8] 이재삼, 박문선,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방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4권, pp.131-167, 2014.

[9]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 업무계획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행복”: 주요정책 추진계획, 2013.

[10] K. Brown and P. B. Coulter,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Police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3, No.1, pp.50-58, 1983.

[11] B. Stipak, “Interpreting Subjective Data for Program Evaluation,” Policy Studies Journal, Vol.12, No.2, pp.305-314, 1983.

[12] 임도빈, 정현정, 강은영,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 경쟁력의 관점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2호, pp.1-29, 2012.

[13] 김인, “지방정부 환경보호서비스 성과의 영향 요

인: 시민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19권, 제2호, pp.291-318, 2007.

[14] T. R. F. Leung, “Accountability to Welfare Service Users: Challenges and Responses of Service Provid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38, pp.531-545, 2008.

[15] 임도빈, 정현정, 강은영,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 경쟁력의 관점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2호, pp.1-29, 2012.

[16] 정웅, “불량식품 사건발생 실태와 경찰의 위해방지 대책,”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2호, pp.103-127, 2014.

[17] D. Denver and G. Hands, “Does studying politics make a difference? The political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school studen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0, pp.268-288, 1990.

[18] 최연태, 박상인,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정책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4호, pp.73-98, 2011.

[19] 김경범, “정책대상집단의 주차규제정책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합리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215-226, 2015.

[20] 이영희, 이승신, “소비자의 국가식품안전정책과 식품업체의 신뢰에 따른 식품안전추구행동,”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14-126, 2010.

[21] 오경수, 천명재, 김희경,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190-202, 2013.

[22] M. R. Fitzgerald and R. F. Durant, “Citizen Evaluations and Urban Management: Service Delivery in an Era of Protes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0, No.6, pp.585-594, 1980.

[23] 이영희, 이승신, “식품업체 및 국가식품안전정책

